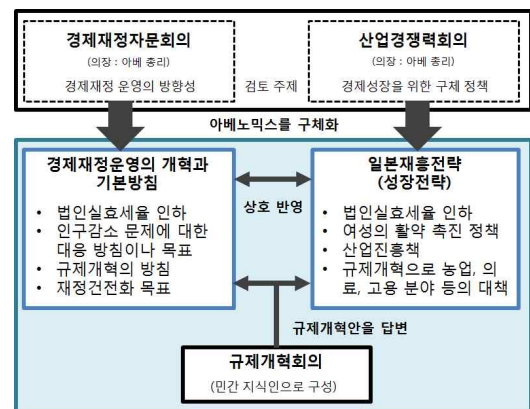


## 신성장전략 · 「일본재흥전략」 개정

- 일본정부는 ‘13.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을 개정한 신성장전략을 책정, 새로 법인세 인하나 농협조직 개혁 등이 추가됐으며 시장이나 경제계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전진을 평가
- 한편에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 회의 난립으로 인한 집중적인 논의 진행의 방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 과제도 남아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아베노믹스 3번째 화살·성장전략 개정

- 일본정부는 6월 24일에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를 각의결정
  - ‘13.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추가
  -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업이나 의료의 규제개혁을 포함시킨 것에 관해 기존 성장전략보다 정부가 개혁에 대해 진지하다는 인상을 준 내용이 됐음



연말의 내년도 예산 편성, 세제 개정 논의 등에서 구체화

자료 : 마이니치신문

- 24일의 임시각의에서는 신성장전략 외에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과 「규제 개혁실시계획」도 결정됐으며 2015년도 예산 편성이나 세제개정요령 등에 반영될 예정

### ①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 □ 개정에 대한 기본적 생각

- 일본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 고용정세, 설비투자 등의 지수에서 보면 회복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착실히 전진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에 의한 변화를 유지하고 경제의 호순환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경제 전체로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일본의 「버는 힘(=수익성)」의 강화가 불가결

## ① 일본산업재흥 플랜

-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 상장 기업이 투명·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시할 때 원칙을 기재한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책정
  - 기관투자자의 행동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보급 촉진
  - 상장 은행에 대해 적어도 1명 이상의 독립사외대표임원 도입을 촉진
  - 사적 정리를 포함한 소수 채권자의 불합리한 반대로 사업 재생이 방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
  - 관공 수법을 재검토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정부조달에 대한 참여 촉진을 검토
- 실업 없는 노동 이동, 다양한 노동 스타일
  -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기 위해 연수요건(최소 연봉 1000만 엔 이상)을 충족하고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고도 직업능력을 가진 노동자(희망자에 제한)에 대해 노동시간과 임금을 분리시킨 「새로운 노동시간제도」를 창설
  - 기업의 중핵 부문·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재량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대상 범위나 절차를 재검토
- 여성의 활약 추진
  - ‘19년도말까지 「방과후 아동 클럽」의 정원을 약 30만 명 확충
  - 육아 경험이 풍부한 주부들을 「육아 지원원(가칭)」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창설
  - 공공조달이나 각종 보조 사업에서 여성의 활약 추진에 적극적인 기업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수주의 기회 증대를 도모
  - 유가증권 보고서에 여성 임원 비율의 기재를 의무화
  - 배우자 공제의 재검토 등 일하는 스타일에 중립적인 세제·사회보장제도 등의 검토
- 외국인재의 활용
  -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근본적 재검토하고 대상 직종의 확대, 실습기간의 연장(3년 → 5년), 인수 정원의 확대를 추진
  - 제조업의 해외자회사 등 종업원의 일본국내 인수
  - 간병 분야의 국가자격 등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

- 과학기술의 이노베이션 추진, 세계 최고의 지재입국
  - 로봇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로봇 시장을 제조 분야에서 현재 대비 2배, 서비스 등 비제조 분야에서 20배로 확대
  -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창설하고 현장 니즈를 고려한 구체책을 검토
  - 기업의 이익과 발명자의 인센티브가 양립하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지향
  - 실효성이 높은 영업비밀 누설방지책을 검토
- 입지경쟁력의 강화
  - 국가전략특구를 추진하고 「칸사이권」 「후쿠오카시」 외의 구역에서도 구역회의를 설립, 빠르면 이번 가을부터 사업을 시작
  -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가사 지원인재에 새로운 재류 자격을 부여, 창업 인재들의 인수요건도 완화
  - '15년도부터 수년간으로 법인실효세율을 20%대(목표는 독일(29.55%) 수준)까지 인하
  - 연금적립금융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기본 포트폴리오를 재검토, 운용위원회에 복수 상급위원을 배치
  - 지역의 활용 유지와 도쿄 일극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저출산과 인구감소 극복(50년 후에 인구 1억 명 수준 유지)을 목표로 한 총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사령탑을 일본경제재생본부에 설치
-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
  - 고효율의 화력발전의 도입 추진과 아시아·동구 등에 대한 보급
  - 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재검토
  - 안전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
  - 전력회사의 배송전 부문을 '20년까지 분리

## ② 전략시장 창조 플랜

- 국민의 「건강장수」 연신
  - 의료·개호 등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홀딩스 컴퍼니형 법인제도(가칭)을 창설
  - 의료용 의약품에서 일반용 의약품으로 이행(스위치 OTC)의 촉진
  - 보험진료와 자유진료를 조합시킨 혼합진료를 확충하기 위해 새로 「환자 신고 요양(가칭)」을 창설
  - 저명한 유효성인 예상되는 의약품 등의 승인심사 기간의 반감(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고품질의 농림수산물
  - 쌀의 생산 조정을 재검토하고 '18년 생산 쌀부터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목표의 배분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을 실시
  - 농업위원회의 선거제도 및 의회 추천·단체 추천에 의한 선임제도 폐지, 지자체의 선임위원으로 일원화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을 완화, 지역의 농협이 창의 연구할 수 있는 농협개혁을 추진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 전중)의 조직 개혁,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의 주식회사화 추진
- 관광 자원의 활용
  -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 특히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에 대한 비자 면제를 조기 실현
  -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장 1년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15년도부터 창설
  - 무료 공중 무선LAN 환경의 정비

### ③ 국제전개 전략

-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TPP의 조기 타결을 지향
  - RCEP, 한중일 FTA, H EU FTA 등의 경제연계 협상을 동시로 진행, 전략적이고 신속히 추진
- 일본음식이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판매하는 쿼터팬 추진 체제를 구축

### ② 단기적 추진 계획

- 경제 회복의 지연이 지적되는 지방이나 중소기업에도 배려하고 지방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방창생본부」를 올해 7월에 설립 예정
  - '15년 봄에 통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방에도 확대하도록 주력
- 약 129조 엔의 공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GPIF를 이번 가을에 재검토, 자산 구성의 60%를 차지하는 국내채권 중심의 운용에서 보다 높은 운용 이윤이 기대되는 국내주식 등의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침을 제시할 예정

- 환자가 일본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에 납득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16년도부터 실시 예정
- '20년에 방일 외국인을 2000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비자를 철폐하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비자 취득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 면세점도 현재 대비 2배로 확대

### ③ 신성장전략에 대한 반응·평가

- 닛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에 금기도 성역도 없다. 일본경제의 가능성을 개회시키기 위해 어떤 장벽도 타파하겠다』는 주장과 의료, 고용, 농업 등 관계 성정이 기득권익을 지키려고 하는 암반규제에 치고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아사히신문은 신성장전략이 일본정부의 개혁에 대한 진심 정도를 시장이나 투자가에 인상을 남겼다고 분석, 6월 13일에 신성장전략의 초안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13.6월의 성장전략보다 파고들어갔다고 언급
  -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아베 정권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
- 한편에서 마이니치신문은 법인실효세율 인하에 따른 감수 분을 채우는 재원을 둘러싼 정부·여당 내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고용이나 농업 등의 규제완화 정책도 내용이 애매모호함으로 불안이 남아 있다고 신중하게 보고 있음
  - 예를 들면 일의 성과로 임금을 결정하는 「새로운 노동시간제도」는 희망자에만 적용되지만 회사가 희망을 강제하거나 성과의 수준의 기준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있음
  - 산케이신문은 과거 정부들이 책정해 온 성장전략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을 책정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들고 있으며, 제기된 내용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경제계의 평가	
아사노 토시오 (아시히화학 사장)	인구감소의 방지를 추가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법인세 감세와 재정 재건 등 상반하는 내용이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보이지 않음
나가모리 시게노부 (일본전산 사장)	공적연금운용의 기본 포토폴리오의 재검토 제언 등은 평가하지만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고용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 수 없음
바바 하지메 (JFE홀딩스 사장)	TPP 협상의 가속과 재정,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지만 법인세율 20%대로 인하시킨다는 방침이 제시된 것은 평가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사장)	이노베이션 진흥이나 기업 거버넌스 향상 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이들을 착실히 실행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미야나가 슌이치 (미쓰비시중공업 사장)	성장전략이 대담한 금융정책, 재정정책과의 일관성이 있다는 점은 평가, 인프라 정비 등 민간의 활용 확대에 대한 언급이 부족
야나이 타다시 (파스트리테이링 회장)	재정재건 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여성 활용 제도나 인구 유지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세운 점은 평가할 수 있음
야마모토 료이치 (J프론트리테이링 사장)	관광 분야에서 방일 외국인의 목표와 구체책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의료, 고용, 농업에 대해서는 더욱 개혁이 필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 도레이 회장)	경제계의 생각과 같이하는 내용임으로 높게 평가, 특히 법인세를 20%대 까지 인하시키는 것은 획기적인 방침이며 실현되도록 기대
하세가와 야스치카 (경제동우회 회장, 타케다약품공업 사장)	농업, 의료·개호,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이 명기된 방침의 결정을 평가, 중간 목표인 적자 대비 GDP 비율의 반감은 '15년도 예산으로 달성해야 함
전문가의 평가	
미즈호총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실효세율을 3년간에 29%, 5년간에 25% 인하시킬 수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법인 감세의 대체재원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과제이고 고정자산세나 소비증세도 필요
니혼총합연구소 조사부장	노동시간규제의 완화는 평가할 수 있으며 직무나 시간을 제한한 「한정정규직」의 보급도 생산성 향상에 불가결
도쿄대학 교수	화이트칼라이그젠프션이나 재량노동제의 확대는 과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야 함
야마토총연 연구원	환자의 희망에 따르는 시스템이 있으면 보험 외의 첨단의료 선택하기 쉽게 됨
게이오대학 교수	실시의료기관을 크게 확대하면 치료의 유효성·안전성의 확인에 문제가 생길 것임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	농협을 개혁의 대상으로 한 것은 크게 평가할 수 있으며 농업위원을 농가에서 선임하는 시스템도 없어지면 담합 체질도 개선될 것임
미야기대학 특임교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이나 농업위원회는 기업 등의 농업 참여를 방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함

#### ④ 한국에 주는 시사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0%로 일본이 법인세율을 30% 미만(29%대)까지 인하시켜도 아직 차이가 많이 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14.1월에 법인실효세율을 25.00%에서 22.00%로 인하시켰고 영국은 '15.4월부터 23.00%에서 20.00%로, 호주는 '15.7월부터 30.00%에서 28.50%로, 베트남은 '16.1월부터 22.00%에서 20.00%로 감세할 예정
- 일본의 농업 규제개혁이 진행되면 그동안 농산물 보호를 위해 반대가 강했던 한일 FTA나 한중일FTA의 추진에 진전이 기대됨
- 신성장전략에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TPP나 RCEP 등 다자간 경제연계의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구체적인 시책으로서는 로봇 분야의 육성이 눈에 띄는 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업원 1만 명 당 산업용 로봇 이용 대수가 일본보다 많은 로봇 산업 선진국으로서 일본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에서 고도 외국인재의 활용이 확대되면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의 우수인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성장전략에는 안전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실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여전히 투자 유치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참고자료>

일본 총리관저 보도자료(2014.6.24.), 닛케이신문(2014.6.25.), 아사히신문(2014.6.25.), 마이니치신문(2014.6.25.), 요미우리신문(2014.6.25.), 산케이신문(2014.6.25.)